

정종섭·국정교과서 논란…첫날부터 난타전

안행위 행자부 국감, 날짜 놓고 공방…野 불참 속 ‘반쪽’

교과서 국정화 놓고 파행…정무위, 신동빈 회장 증인 채택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상임위 곳곳에서 진통과 파행이 이어졌다.

이날 여야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견제사 논란과 국가교과서의 국정화,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전방위로 부딪혔다. 우선 안전행정위의 행자부 국정감사는 지난달 말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견제사’ 논란으로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정래 간사는 “애초 선관위가 7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여야가 협의해 10일 행자부 국감을 잡았으나 선관위 발표가 14일로 연기됐으니 그 이후에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기운 간사는 “정 장관이 여러 번 국민께 심리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면서 “적절하지 않았지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공방이 오전 내내 이어진 끝에 오후 국감은 야당의 불참 통보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를 놓고 오전에는 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의사 진행발언만 1시간 정도 이어지다가 정회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사실 오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균형잡힌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북한과 베트남, 이슬람 국가 등 소수국가에 불쾌하고 검인정이 세계적 추세인데 왜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보도 공정성이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방송사는 지배구조 등을 두고 많은 논란이 되는데, 네

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방송 못지 않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책임은 그만금 지지 않고 있다”며 “포털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정부·여당의 포털에 대한 압력이 도를 넘었다. 사실상 여당에 유리한 기사가 더 많은 데도, 중립성을 운운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농식품위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 등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유성업 의원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무역이득공유제 개념을 만들 수 있다”며 “용역만 해놓고 안 된다고 뒤로 자빠지면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성실히 도입을 검토하기로 약속하고 진행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특정한 결과를 미리 의도한 맞춤형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서는 여야간 공방으로 정회와 속개가 이어진 끝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과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 카카오페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행위 ‘반쪽 국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견제사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지정부 국정감사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야당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안 14일 제출

새정치 “선거 중립 위반, 박대통령·선관위 침묵”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4일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 내용과 정 장관의 견제사 등을 거론하며 “이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 대변인은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도 조사결

과 발표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제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발언이 정 장관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정 장관을 탄핵소추한다면 최 부총리 역시 탄핵 소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정치연합이 129석의 의석 수를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소추안 발의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결은 21표 이상이 필요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국사 교과서 결론 미리 말씀 못드려”

황우여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국정인지 검인정인지 다시 고시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전에 미루어 잠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날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자료에서 검정체제 강화와 국정 전환 두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교육부는 검정 유지안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과 구현이 가능하고 창의적 교과서 개발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된 검정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 전환에 대해서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합의된 보편적 이념과 가치교육에 효과적이며 국민통합과 균형있는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검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FTA 피해 보전 ‘무역이득공유제’ 도입해야”

주승용 새정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여수)은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FTA로 인해 예상되는 농·어업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며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손익이 늘어난 대기업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함으로써 FTA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정부가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검사에 책임 물어 무리한 수사 막아야”

박지원 새정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의 경우, 해당 검사의 책임을 물어 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과으로 구속된 사



람이 2012년 1107명, 2013년 1488명, 2014년 1031명이고, 무죄판결 증가로 인한 형사 보상금 지급 금액도 2011년 225억원 6600만원에서 2014년 881억6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섬진강 수계 운영합리화 방안 내놔야”

이정현 새누리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섬진강·주암댐이 2년 연속 가뭄으로 저수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암댐 가뭄 대응방안과 산업단지의 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섬진강 수계 운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암댐 저수율이 총



저수량 (4억 5700만톤)의 38%, 1억7500만톤에 불과하고, 주암댐 전체로는 저수율이 46%로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섬진강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총저수량(4억6600만톤)의 10%인 4800만톤의 저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김승남 새정치 의원

국회 농식품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10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농축수산물이 금품수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면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간 우리 농축수산업은 EU·미국·영연방 등과의 FTA체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은 소규모 축산농가 폐업과 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기반조각 약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 상황에서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농축수산물을 불법금품 대상에 포함하는 등 농어촌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70%

+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 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리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영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